

이슈브리프 805호
(2026. 2.20)

‘민헌 안보회의 2026’의 주요 내용과 함의 및 시사점

제805호

박병광 bkpark@inss.re.kr



국문초록

제62회 뮌헨 안보회의(MSC 2026)는 세계가 더 이상 하나의 규범과 질서를 공유하지 않는 시대에 진입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1963년 출범 이후 글로벌 안보 논의의 중심 무대 역할을 해온 뮌헨 안보회의는, 올해 회의에서 '질서의 위기'를 넘어 '질서 전환'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특히 회의에 앞서 공개된 뮌헨 안보보고서 2026은 국제질서가 점진적 개혁의 단계가 아니라, 기존 제도와 규범이 구조적으로 해체되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를 '파괴적 정치(wrecking-ball politics)'의 확산으로 규정하며,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약화가 일시적 혼란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신뢰 붕괴와 결합된 구조적 변화임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오늘날 국제질서의 특징으로 질서의 파편화, 안보 개념의 확장,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 동맹의 조건화, 하이브리드 위협의 일상화, 기술 경쟁의 안보화, 그리고 정치·사회적 신뢰의 침식을 제시한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단일한 규칙 체계로 운영되지 않으며, 군사안보를 넘어 기술·공급망·에너지·사이버 공간이 핵심 안보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술과 안보, 산업 정책이 결합된 새로운 전쟁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됐다. MSC 2025 보고서와 비교할 때, 2026 보고서의 가장 큰 차이는 문제 인식의 단계 변화다. 2025년이 '관리 가능한 위기' 속에서 질서의 보완과 복원을 모색했다면, 2026년은 질서 붕괴를 전제로 한 '적응과 선택'의 문제를 제기한다. 도전의 원인 역시 비서구 국가에서 서구 내부, 특히 민주국가 내부의 신뢰 붕괴로 이동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적극적 행보도 두드러졌다. 중국은 다자주의와 유엔 체제를 강조하며 스스로를 '안정의 수호자'로 규정했고, 미중 경쟁 속에서 유럽과 글로벌 사우스를 향한 외교적 공간 확장을 시도했다. 이는 국제질서 재편 국면에서 중국식 역할 모델을 제시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MSC 2026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동맹은 여전히 핵심 자산이지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는 아니며, 전략적 자율성과 다층적 대응 역량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방, 경제안보, 기술주권, 공급망 안정성은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 축이 되었고, 무엇보다 전략의 지속 가능성은 국내 사회의 신뢰와 합의에서 출발한다. 뮌헨 안보회의 2026은 한국에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어떤 전략 국가로 남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주제어 : 뮌헨 안보회의, 국제질서, 질서의 파편화, 동맹 해체, 전략적 자율성

제62회 ‘뮌헨 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가 2026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렸다. 1963년 처음 개최된 뮌헨 안보회의는 지난 수십 년간 각국의 고위 정치·군사·외교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안보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표적 안보 포럼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회의에도 전 세계에서 40명 이상의 국가원수 및 정부 수반이 참석했으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 지도자들이 포함되었다. 오랜 동맹 관계가 도전에 직면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약화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불안정성과 분쟁이 확대·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 뮌헨 안보회의 2026은 그 자체로 중대한 전환점을 상징했다. MSC 2026에서는 유럽의 안보와 국방, 대서양 동맹 관계의 미래, 다자주의의 재활성화, 글로벌 질서를 둘러싼 경쟁적 비전, 지역 분쟁, 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안보적 함의 등 다양한 핵심 의제들이 폭넓게 논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광폭 행보 역시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MSC 2026 연례보고서의 주요 내용: 파괴의 한가운데서(Under Destruction)

올해 뮌헨 안보회의 운영진이 회의 개막에 앞서 공개한 공식 보고서 ‘뮌헨 안보 보고서 2026(Munich Security Report 2026)’은 오늘날 국제질서가 구조적 전환 국면에 진입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보고서의 핵심 진단은 세계가 더 이상 점진적 개혁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신 기존 제도와 규범, 동맹 체계를 과감히 흔들고 재편하려는 이른바 ‘파괴적 정치(wrecking-ball politics)’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아이러니하게도 1945년 이후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그 어느 나라보다 큰 역할을 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는 가장 두드러진 파괴자가 되었다”며, “그 결과 80년이 지난 지금 전후 국제질서가 실제로 해체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약화는 일시적 혼란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신뢰 붕괴와 맞물린 구조적 변화라는 것이 보고서의 인식이다.

제62회 뮌헨 안보회의 연례보고서는 첫째, ‘질서의 파편화(fragmentation)’를 핵심 개념으로 제시한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더 이상 단일한 규범 체계에 의해 운영되지 않으며, 지역·진영·이슈별로 상이한 규칙과 네트워크가 중첩되는 다층적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단순한 세력 균형의 변화가 아니라 규범적 기반의 약화를 의미한다. 특히 무력 사용, 경제 제재, 기술 통제의 일상화는 국제정치의 예외 상태를 상시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둘째, 보고서는 ‘안보 개념의 확장’을 강조한다. 군사력 중심의 전통적 안보를 넘어 공급망, 에너지, 식량, 사이버 공간, 인공지능, 기후가 모두 안보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통해 드론·AI·위성정보의 결합이 전쟁 양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기술 경쟁이 전략 경쟁의 핵심 축이 되었음을 부각한다. 이는 산업 정책과 안보 정책이 사실상 통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보고서는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주요 변수로 다룬다. 다수의 비서구 국가들이 미중 경쟁에서 일방적 편승을 거부하고, 사안별 선택과 실용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냉전기와 달리 이념적 양극화가 완전하게 재현되지 않는 이유로 제시된다. 국제질서는 이념 블록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유동적 네트워크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보고서는 ‘대서양 동맹’은 여전히 유럽 안보의 핵심 축이지만, 미국의 역할과 의지가 언제나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는 인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따라 유럽은 미국 의존을 전제로 한 기존 안보 모델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방위 역량과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는 단순한 국방비 증액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 안보 주체로서 스스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다섯째,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 안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규정한다. 동시에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하이브리드 위협이 전통적인 군사 위협과 동일한 수준의 전략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전력망과 통신, 디지털 인프라는 군사와 민간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전장이 되었으며, 이는 국가안보의 개념 자체가 재정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보고서는 ‘기술 발전’을 양날의 검으로 제시한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사이버 공격과 정보 조작, 여론 분열을 증폭시키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 경쟁은 더 이상 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체제 경쟁의 핵심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분명히 한다.

일곱째,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정치·사회적 신뢰의 침식(the erosion of political and social trust)이다. 보고서는 민주적 제도와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 하락이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고, 점진적 개혁보다 급진적 변화와 구조적 파괴를 선호하는 정치적 선택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국내 정치의 극단화를 통해 다시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MSC 2025와 MSC 2026의 비교 : 관리 가능한 위기에서 질서 붕괴의 현실로

‘핀헨 안보보고서 2025’와 ‘핀헨 안보보고서 2026’은 불과 1년의 간격을 두고 발간되었지만,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문제 인식과 진단의 깊이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두 보고서의 차이는 단순한 강조점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인식의 단계 자체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2025년 보고서는 국제질서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이를 ‘관리 가능한 위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규범과 제도가 흔들리고는 있으나, 제도 개혁과 정책 조정을 통해 기존 질서를 유지하거나 복원할 수 있다는 전제가 보고서 전반에 깔려 있었다. 국제사회의 핵심 과제는 질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완하고 지켜낼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2026년 보고서는 국제질서의 위기를 질적 전환으로 규정한다. 보고서가 제시한 ‘파괴적 정치(wrecking-ball politics)’라는 개념은, 더 이상 기존 질서를 손질하거나 개선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이를 의도적으로 흔들고 해체하려는 정치가 확산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문제의식은 “질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서 “질서가 무너지는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대응할 것인가”로 이동했다.

행위자에 대한 시각에서도 두 보고서는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2025년 보고서는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의 주된 원인을 러시아와 중국 등 비서구 권위주의 국가에서 찾았다. 서구는 여전히 규범에 기반한 질서의 수호자라는 인식이 비교적 명확하게 유지되었다. 반면 2026년 보고서는 질서 붕괴의 진원지를 서구 내부, 특히 민주주의 국가 내부의 정치·사회적 신뢰 붕괴에서 찾는다. 전후 국제질서를 설계하고 주도

했던 국가들 내부에서조차 제도와 규범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질서 자체가 내부로부터 침식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다.

동맹과 다자주의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달라졌다. 2025년 보고서는 대서양 동맹과 다자주의가 흔들리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조정과 복원을 통해 다시 기능할 수 있다는 기대를 유지했다. 동맹은 여전히 기본 전제였고, 문제는 그 운영 방식에 있었다. 그러나 2026년 보고서는 동맹을 더 이상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로 보지 않는다. 동맹은 정치적 의지와 국내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약화될 수 있는 조건적 자산이며, 이에 따라 유럽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스스로의 전략적 자율성과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다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안보 개념의 확장 방식에서도 차이가 분명하다. 2025년 보고서는 사이버, 기술, 경제안보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었지만, 여전히 군사 안보가 중심축을 이뤘다. 반면 2026년 보고서는 사이버 공격, 에너지와 디지털 인프라, 정보전과 여론 조작을 전통적 군사 위협과 동등한 전략적 위협으로 격상시킨다. 안보는 더 이상 군과 전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기술, 정치 전반을 관통하는 총체적 문제로 재정의 된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조 역시 크게 달라졌다. 2025년 보고서가 경고적이지만 절제된 톤 속에서 개혁과 보완의 가능성을 모색했다면, 2026년 보고서는 훨씬 직설적이고 비관적인 어조로 질서 전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정책적 메시지도 ‘개혁’보다는 ‘적응과 선택’에 가깝다. 결국 두 보고서의 차이는 위기의 강도 차이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단계 차이라 할 수 있다. 2025년 보고서가 “지켜낼 수 있는 질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묻는 보고서였다면, 2026년 보고서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질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이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오늘날 국제정치가 맞이한 가장 중요한 변화다.

MSC 2026과 중국의 광폭 행보 및 국제질서

제62회 뮌헨안보회의는 더 이상 위기의 징후를 진단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회의 전반을 관통한 인식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수호’가 아니라, 그 질서가 이미 해체 단계에 진입했다는 냉정한 자각이었다. 유럽 지도자들은 전후 국제질서의 종언을 공공연히 언급했고, 미국 역시 동맹의 결속을 강조하면서도 역할과 부담의 재조정을 시사하며 기존 질서의 변화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행보는 특히 주목을 받았다. 중국은 다자주의와 유엔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대국 역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함으로써, 스스로를 ‘안정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하려 했다. 이는 미국의 동맹 중심 전략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를 향한 외교적 확장 시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유럽을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호명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확산되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담론을 중국 외교 공간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도 분명히 드러났다.

안보회의 기간 동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다수의 양자 회담과 연설을 통해 국제질서 불안정성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중국 세션’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일본 지도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중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아시아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전개라고 규정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도 왕이는 협력과 경고를 병행했다. 그는 중미 관계가 국제정치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임을 강조하며, 상호 존중과 평화적 공존, 윈윈 협력을 통해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디커플링을 경계하면서

2026년을 관계 안정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미국이 대만 문제를 활용해 중국을 견제할 경우 양국 관계가 심각한 대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중 공존의 가능성은 결국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였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유럽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럽의 역할과 책임을 부각했다. 이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를 완전히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유럽의 신뢰를 일정 부분 확보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평가된다. 이번 뮌헨 안보회의에서 드러난 중국의 적극적 발언과 행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과 규범을 제시하려는 전략적 시도였다. 중국은 충돌을 피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관리된 경쟁'의 틀 속에서, 미중 관계의 안정과 다자 질서 재구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뮌헨 안보 회의 2026이 내포하는 함의와 시사점

제62회 뮌헨 안보회의(MSC 2026)가 던진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세계가 더 이상 하나의 질서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현실 인식이다. 단일한 규범과 규칙이 작동하던 시대는 저물었고, 이제는 서로 다른 질서 구상이 경쟁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은 동맹을 축으로 한 기술·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중국은 다극적·다자적 국제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한다. 유럽은 이 두 흐름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려 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질서 경쟁을 가속화하는 촉매이자 시험장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중견국의 전략 선택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겉으로는 진영 선택을 강요받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요구되는 것은 기술, 공급망, 안보 보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다층적 전략 역량이다. 군사동맹과 경제협력, 기술 표준 참여와 외교적

균형을 병행해야 하며, 인공지능과 방산 기술에서의 선택은 더 이상 산업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일부가 되고 있다. 2026년의 뮌헨은 단순한 위기 토론의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존 질서의 종언을 전제로,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놓고 경쟁하는 공간에 가까웠다. 문제는 그 설계도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다. 서로 다른 비전이 충돌하는 가운데, 향후 국제사회의 핵심 과제는 갈등을 관리하면서도 협력의 여지를 유지하는 데 있다. 미중 관계는 경쟁과 관리가 병존하는 구조 속에서 긴장을 이어갈 것이며, 글로벌 질서는 단극 체제의 기억을 뒤로하고 다극적 현실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의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도 분명하다. 올해의 보고서는 대서양 동맹조차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안전장치가 아님을 강조하며, 이는 한미동맹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동맹의 중요성은 여전히 절대적이지만, 과도한 의존은 전략적 취약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은 동맹을 ‘보장된 전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해야 할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전략적 자율성 논의 역시 동맹을 대체하는 의미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선택지를 넓히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 축적을 뜻한다. 국방 역량, 경제안보, 기술주권, 공급망 안정성은 이제 외교·안보 전략의 주변 요소가 아니라 핵심 축이며,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과 같은 전략 기술 분야의 선택은 곧 외교적 입장과 직결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시사점은 ‘신뢰’의 문제다. 국제 질서의 불안정은 국가 간 신뢰 붕괴에서 시작되지만, 그 뿌리는 종종 국내 정치와 사회 내부에 있다. 외교·안보 전략의 지속 가능성은 군사력이나 외교 기술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사회적 합의와 제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장기 전략에 대한 국민적 공감의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결국 MSC 2026은 한국에 분명한 질문을 던진다.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은 단기적 유불리에 흔들리는

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신뢰와 일관성을 축적하는 전략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보다 정교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사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